

국민행복표준의 경향 및 사회적 논의에 대한 분석*

심준섭** · 김지수*** · 윤대섭****

논문 요약

최근까지 표준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와 해당 분야의 실무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 결과 일반 대중의 표준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표준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국민행복표준(생활공감표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행복표준(생활공감표준)의 경향과 사회적 논의 방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민행복표준에 대한 분야별 사회적 논의 수준은 산업표준에 대한 통계분석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하며 전문 용어가 포함되지 않은 표준과제가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행복표준과제의 내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분야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융합표준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주제어: 국민행복표준, 사회적 논의, 표준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 이 논문은 2014년도 한국표준협회의 재원으로 <제2회 표준정책 마일스톤 연구 - 국가표준 거버넌스 선진화>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SA-2014Milestone-11).

** 주저자,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정책학 박사수료

**** 공동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국립장원대 강사

I. 서론

일상생활에서 ‘표준(standards)’이라는 표현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다. 국어사전에서 표준의 정의를 보면, 사물의 정도나 성격을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으로서의 ‘준거(準據)’ 또는 어떤 집단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을 의미하는 대표값으로서의 ‘평균’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표준이라는 표현이 어떤 기준, 규격 등과 같은 의미로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표준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표준이 얼마나 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등과 같은 표준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KS마크가 있다는 정도를 인지하고 있을 뿐, 표준의 의미조차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표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표준이 주로 국가의 표준활동이 산업과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표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일 것이다¹⁾. 표준이 주로 산업현장에서 전문가들에게 표준이 관심사인 반면에, 일반 국민들에게 표준은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 존재를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산업 또는 기술분야 중심의 표준화 활동은, 정부가 2008년도에 ‘KS S 6001 콜센터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의 국가표준을 제정·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같은 해 10월 정부는 그동안 기술표준을 위주로 제정해 오던 업무추진 방향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미래의 표준화 과제’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대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²⁾. 이후 국민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표준(생활공감표준, 2009년~2012년), 국민생활에 행복을 줄 수 있는 표준(국민행복표준, 2013년~현재)을 제정해 매년 이를 발표하고 있다.³⁾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2010년도에 제 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고, 생활밀착형·서비스 표준화 등을 포함한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를 4대 분야중 하나로 설정한 데 잘 반영되어 있다. 국가의 표준활동이 기존의 산업 또는 기술표준화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또는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 1)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 표준활동은 KS제정을 제도화한 산업표준화법이 제정된 1961년도를 그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 2) 조사결과 일반국민들은 충전기(가정공간), 신호체계(이동공간), 음식점 1인분(소비공간)등의 표준화를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통신호체계 및 도로표지판 등 이동공간에서의 표준화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32%)으로 나타나 향후 U-city 등 IT기반의 우리 사회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9)
- 3)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시기별로 명칭을 생활공감표준, 국민행복표준으로 다르게 명명하고 있고, 과제발굴 선정 및 제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행복표준으로 통일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국민들의 표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생활의 불편한 사항 중에서 표준화의 대상이 되는지를 찾고 표준화를 위한 아이디어로 제안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이 느끼는 문제점이나 불편함이 실제 표준 제정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발굴된 국민행복표준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생활표준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정된 국민행복표준은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을까? 제정된 국민행복표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얼마나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부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국민행복표준과제가 서로 다른 산업 간에 연계된 융합된 기술 간의 표준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분야 간의 기술 융합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II장에서는 관련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국민행복 표준 추진경과를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 전국 종합 일간지들을 대상으로 표준관련 기사들을 수집한 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을 통해 사회적 논의 수준에 대한 분석과정을 기술한다. IV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통해서 통째로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실제 정부가 표준화 정책 과제간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 향후 표준이 국민생활 속으로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제도 현황

1. 표준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들어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속에서 표준 관련 정책과정에도 일반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표준이 국민생활 편익과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김태운, 2013; Kettle, 2000).

하지만 지금까지 표준에 관한 정책의제 형성 및 정책결정 과정은 대부분 관련 민간 전문가와 정책실무자 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는 잘 정립되어 있으나 시민의견 수렴과정 측면에서는 폐쇄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표준과 관련된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⁴⁾ 거버넌스 수준은 다른 정책분야들에 비해 크게 뒤쳐진

4) 여기서 '시민참여'의 개념은 '관련 분야의 실무자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와 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의 2가지로 이원화 된다. 일반적으로 일반국민(시민)의 참여를 인정할 경우 시민참

부분이 있었다. 생활밀착형 표준 발굴에서는 소비자 관련 공공 및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해 왔지만,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표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고, 또한 표준의 특성상 전문적인 용어들이 중심어로 사용됨으로써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전히 비산업분야의 생활밀착형 표준(생활공감표준과 국민행복표준) 발굴 및 제정 과정은, 기술적인 역량을 가진 민간 전문가와 정책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산업표준 제정과정에서는 관련 분야의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확대하고, 비 산업분야의 생활밀착형 표준 발굴 및 제정과정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오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서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으로 변화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은 국민·소비자 편익과 표준 수요자의 요구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표준운용체계 역시 정부-민간 협력표준체계, 개방형·협업형 표준체계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림 1> 제1차~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표준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나 현실적으로 표준정책 분야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행복표준을 제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참여방식을 2012년도까지 웹사이트를 통한 상시 온라인 접수(모든 국민)로

여의 범위가 확대되지만, 어떤 방식의 시민참여가 더 발전된 형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오히려 관련 분야의 실무자나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수요조사가 실질적인 수요를 확인하는데 더 적절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표준분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표준과 달리 비산업 분야의 표준,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범위인 국민생활표준의 경우는, 일반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형태의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견해이다.

만 운영하다가,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표준올림피아드 참여자 제안 (중고등학생), 국민행복표준협의회 실무위원회 산하의 3개 분과위원회 내부 제안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채널을 다양화하였다. 그 결과 2013년도에 채택된 과제의 경우 온라인 접수 60%, 표준올림피아드 및 분과위원회 제안이 40%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발굴되는 표준의 수 또한 연도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꾸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⁵⁾ 특히 일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표준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행복표준 과제를 제안하더라도 최종 선정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⁶⁾ 따라서 변화된 표준 패러다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의 표준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야 한다. 또한 표준과제 제안 제도의 개선 방안 역시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표준 연구 경향의 한계

표준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내연구의 대부분은 기술 분야별 표준 동향 또는 표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박상인, 2009). 아직까지는 시민참여형 또는 국민생활 밀착형 표준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표준화 동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IT 산업에서의 표준화 정책에 관련된 기술적 보고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박상인, 2009). 권영환·최준균(2007)은 IPTV의 표준화 동향을, 김종국(2007)은 디지털시네마의 기술 표준화 동향 및 추진전략, 강유성·최두호·김호원(2008)은 모바일 RFID 보안기술 표준화 동향 및 추진전략, 조재희 외(2007)는 Wibro의 표준화 및 기술 동향, 이강찬(2007)은 웹2.0 관련 핵심 표준화 이슈, 김상국 외(2007)는 3GPP2 UMB 기술 표준화 현황, 서정일·강경욱(2008)은 MPEG 오디오 표준화 동향 등을 소개하고 있다.

표준화 동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외에 표준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박상인 2009), 최승제의 연구(2008)는 통신 산업에서의 표준화와 경쟁법의 조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박상인(2007)은 통신 산업 부문의 표준화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들을 소개하고 있다. 물류 표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이순철(2004)은 미국, 일본, 유럽의 물류 및 물류 표준화 제도와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류 표준화제도에서의 규제개선을 통한 물류분야의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부처별로 이루어지던 물류 및 물류표준화

5) 연도별 온라인 과제 발굴 현황을 보면, 2011년 314종에서 2012년 87종, 2013년 114종 등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기술표준원, 2014a: 2).

6) 2013년도 국민제안 193종 중 최종 표준화 대상과제로 8종이 선정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 2014a: 2).

제도를 통합하는 노력도 강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재형 외(2009)는 향만물류정보 표준화의 타당성을 향만물류정보 표준화의 인식수준, 정보공유 및 획득의 예로사항, 표준화 요소별 인식수준 등에 대한 향만물류표준화의 수요분석을 설문조사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이외에 개별적 표준화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이외에 표준화수요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 박상인(2009)은 표준설정에 관한 국가의 전략적 접근에 대해 논하면서 개별기업들의 표준화 정책 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표준화 정책이 소비자 후생과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내시장의 크기, 기술력 수준, 수출 비중 등에 따라 표준화 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태경(2012)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 다양한 표준화 정책수단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표준화 정책은 단순히 표준화의 시장실패를 보전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의 생애주기, 산업특성 및 시장구조, 규제 및 구매정책, 기술혁신의 속도, 표준제정 과정, 국제적 요인, 표준화 대상 등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반영하는 표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의 전반적 특징은 표준에 관련된 동향들을 분석하고, 표준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관점에서 정책 및 전략을 제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최근의 표준 패러다임 변화 경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민행복표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며⁷⁾, 표준에 관한 사회적 논의 수준 및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아직 진행된 바 없다.⁸⁾ 그 결과 표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정부와 관련 전문가, 실무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참여와 인식수준, 관심도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7) 해외의 경우에도 표준화에 관련해서는 주로 기술 분야에서의 제품 표준화의 효용(Farrell & Saloner, 1985; Besen & Farrell, 1994), 생물학(Krishna & Deepa, 2013), 의학(Drabkin, 1978), 교육학(Beyer, 2002), 무역분야(Gandal & Shy, 2001) 등 개별분야에서의 표준화 동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들과 표준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David, 1987; Samiee & Roth, 1992; Gandal, 2002; Sung, 2008; Swann, 2010)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밀접형 표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8) Choi et al.(2011)의 연구가 발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표준화 연구경향을 분석한 사례가 있는데,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발표된 528개 논문을 대상으로 표준연구의 경향을 분석하여 표준연구들이 관리, 경제, 환경, 화학, 컴퓨터 과학, 커뮤니케이션 등 6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기존 표준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요인 및 군집 분석을 이용하여 표준 연구경향을 분류 및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나 표준의 사회적 논의 수준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표 1> 표준연구의 경향

연구 분야	연구자 (연구시기)	분석방법	주요내용
표준화 동향	박상인(2009)	설문조사	•IT산업에서 표준화 정책에 관한 연구
	권영환·최준균(2007)	현황분석	•IPTV 표준화 경향
	김종국(2007)	현황분석	•디지털시네마의 기술표준화 동향 및 추진전략
	강유성, 최두호, 김호원(2008)	현황분석	•모바일 RFID 보안기술 표준화 동향 및 추진전략
	조재희 외(2007)	현황분석	•Wibro 표준화 및 기술 동향
	이강찬(2007)	현황분석	•웹 2.0 관련 표준화 이슈
	김상국 외 (2007)	현황분석	•3GPP2 UMB 기술 표준화 현황
	서정일·강영욱(2008)	현황분석	•MPEG 오디오 표준화 동향
표준화 제도 및 효과	박상인(2009)	실증분석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최승계(2008)	법제도 분석	•통신 산업에서 표준화와 경쟁법의 조화 문제
	박상인(2007)	실증분석	•산업부문의 표준화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성태경(2012)	정책제언	•표준화 정책수단의 제시를 통한 표준화 정책 필요성 제시
	이순철(2004)	사례비교	•미국, 일본, 유럽의 정책과 우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물류 표준화정책규제의 완화 필요
	조재형 외(2009)	설문조사	•항만물류정보 표준화 타당성에 대한 수요분석

3. 국민행복표준 제도

1) 생활공감표준에서 국민행복 표준으로 변화

2008년부터 2013년 초까지 추진되어 오던 생활공감표준 정책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기존 변화에 따라 국민행복표준으로 개편되었다. 2008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생활공감표준이란, 생활 속의 불편한 사항을 아이디어로 제시하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표준을 말한다 (생활공감표준, 2009년~2012년)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부록 2>, <부록 3> 참조).

2013년부터는 정부는 국민행복을 위한 3대 분야별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는 등 국민행복표준 발굴 및 제정을 추진하였다. 국민행복표준은 국민생활에 행복을 줄 수 있는 표준으로 기존 생활공감표준에서 사회적 약자와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 표준 (국민행복표준, 2013년~현재)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부록 2>, <부록 3> 참조). 특히 국민행복표준은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필요에 따라 제언을 함으로써 표준과제를 발굴·제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행복표준은 소비자 단체, 학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국민행복표준협의회에 의해 과제의 발굴선정, 이행, 확산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국민행복표준 홈페이지, www.lifstandard.or.kr). 따

라서 생활밀착형 표준에 대한 발굴과 이행, 확산의 전 과정이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고 있다.

2) 현황 및 제도의 한계

국민행복표준과 생활공감표준은 명칭과 세부분야 분류에서 차이가 있지만, 상향식의 생활밀착형 표준화 과제 발굴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가장 최근의 명칭인 국민행복표준으로 통일하였다.

생활공감표준은 표준을 ‘편리한 사회와 건강한 사회, 미래사회’의 3개 분야로 분류한 반면, 국민행복표준은 ‘편안한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 풍요로운 사회’의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생활공감표준의 경우 편리한 사회와 건강한 사회 분야의 표준화 추진과제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국민행복표준의 경우 3개 분야 모두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표준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3가지 분야의 분류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분류기준 역시 분명하게 공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행복표준과 생활공감표준의 표준화 분야가 상이하야 분야별 비교가 쉽지 않다. 둘째, 표준화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 부족, 중복 제안, 표준개발의 난이도 등의 이유로 과제 제안을 하더라도 최종 선정과정에서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 2013년의 경우 국민제안 193개 표준화 과제 중에서 8개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제안 표준화 절차를 일원화하고, 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표준화 대상과제로 선정되어 표준제정이 완료된 국민행복표준의 실제 사회적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상향식(bottom-up 방식)의 표준화 과제 발굴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난 6년간 제정된 국민행복표준⁹⁾의 사회적 논의 경향을 분석하고,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을 통해 국민행복표준과 같은 생활밀착형 표준화의 사회적 논의 수준과 생활밀착형 표준과 산업표준 분야의 사회적 논의 수준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 분야 간 차

9)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생활표준 혹은 국민행복표준으로 제정 완료된 과제는 128개 선정과제 중 89개이다(<부록 2>에서 선정 후 미완료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제정이 완료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는 표준과제선정이 반드시 표준제정완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2년 선정 과제 40개 중 32개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2014년 완료예정이며 8개 과제만이 완료 미정인 반면, 2011년 선정 과제 13개의 경우 완료 및 완료 예정 시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 현재 제정 완료 혹은 완료예정인 과제 89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선정된 국민생활표준 혹은 국민행복표준 과제의 전체 내용은 <부록 3>에 수록하였다.

이점과 연결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차이점과 연결 필요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민행복표준 발굴선정과 제정에 있어서는 산업표준 제정과 다른 논의의 수준이 존재함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표준 제정과 차별화되는 생활밀착형 표준만의 맞춤형 정책제언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에 전문가와 분야별 실무자들에게 국한되었던 표준에 관한 수요연구의 외연을 보다 확장하고, 표준이 국민생활 속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정부가 국민행복표준(생활공감표준)을 선정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분석대상 국민행복표준(생활공감표준)과제의 범위는 2009년~2014년 6월까지 제안된 128개 과제(<부록 1>과 <부록 2> 참조) 중에서 아직 표준화가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과제(<부록 2>)를 제외한 표준화 완료과제 89개(<부록 1>)이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국민행복표준(생활공감표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 종합일간지에 보도된 표준관련 신문 기사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¹⁰⁾.

사회적 논의 수준에 대한 분석 방법은 다양하지만, 실증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논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신문기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김인혜 외, 2006; 김현철 외, 2009; 안정희·배성아, 2009; 최윤정·권상희,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논의 수준 분석을 위해 신문 기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한국언론재단의 기사검색 서비스인 카인즈(kinds)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각 국민행복표준(생활공감표준) 과제명¹¹⁾’과 ‘표준화, 호환성, 서비스인증, 표준개발, 평가방법표준, 기준강화’를 검색한 결과¹²⁾ 총 2,098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검색 시 본문내용에 해당 키워드가

10) 신문기사 검색을 위한 대상 과제의 범위는 2014년 현재를 기준으로 표준화가 완료되었거나 2014년 내로 완료예정인 과제 89개이다. 이때 신문기사는 사설이나 칼럼 같은 전문가에 의한 기술이 아닌 일반 보도자료가 중심이 된다.

11) 과제명은 <부록 1>과 같은 키워드로 수정한 뒤 검색되었다.

12) ‘각 국민행복표준(생활공감표준) 과제명 + 표준화’, ‘각 국민행복표준(생활공감표준) 과제명 + 호환성’, ‘각 국민행복표준(생활공감표준) 과제명 + 평가방법표준’, ‘각 국민행복표준(생활공감표준) 과제명 +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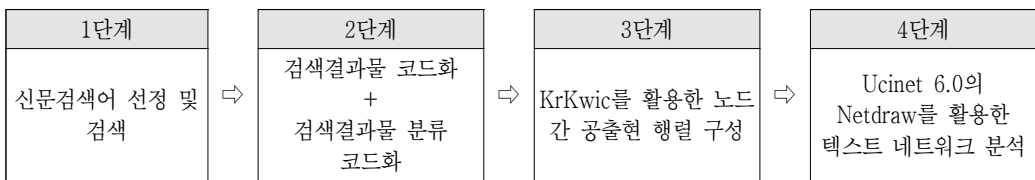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제목에 해당 키워드가 나타난 경우와 본문에 나타난 경우는 단어의 중요성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기사에서 제목보다는 본문에 해당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색된 기사들 중 본 연구와 무관한 기사와 단순 중복 기사를 코더 간 교차검색을 통해¹³⁾ 제외하였고, 그 결과 총 321개 신문 기사가 분석대상 텍스트로 선정되었다. 1차 기사검색 결과에 대해 연구자 3인이 각자 확인하면서 관련이 없는 기사를 제거하고, 단순중복 기사를 제외한 뒤 최종 일치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였다.

‘표준화, 호환성, 서비스인증, 표준개발, 평가방법표준, 기준강화’을 검색 키워드로 사용한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신문기사에서 표준화 필요성을 단순히 표준화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호환성, 표준개발, 평가방법표준, 기준강화, 서비스인증’등과 같은 표현으로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키워드의 선정을 위해 표준 분야 전문가 2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¹⁴⁾.

3. 분석방법: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는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위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words)를 노드(node)로, 단어 간 공출현을 링크(link, tie)로 하여 언어적 표현에 대한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는 점이 사회네트워크 분석과 크게 다른 점이다. 본 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다음 <그림 2>와 같은 4단계로 진행되었다.

<그림 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절차



준개발’, ‘각 국민행복표준(생활공감표준) 과제명 + 서비스인증’, ‘각 국민행복표준(생활공감표준) 과제명 + 기준강화’로 검색하였다.

- 13) 첫 번째 단계의 코더간 신뢰도는 69%, 두 번째 단계의 코더간 신뢰도는 87%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코더간 신뢰도는 완전히 일치하였다.
- 14) 한국표준협회 직원 2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키워드를 선정하였다(예: 표준개발, 표준화, 호환성, 방법표준, 서비스인증표준, 기준). 그 중 일부는 기사검색에서의 검색 용이성을 위해 연구진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다(예: 평가방법표준, 서비스인증, 기준강화).

1단계, 다음의 <표 2>의 사회적 논의 분류표를 활용하여 신문기사검색에 활용될 키워드(신문 검색어)를 선정하고, 신문검색을 실시한다. 첫째, 국민행복표준 및 생활공감표준 과제는 공표된 과제명 <부록 1>의 우측과 같이 검색용 키워드로 전환하여 검색하였다. 둘째, 표준화의 경우 표준화를 의미하는 용어가 다양하고, 실제 신문기사상에서 표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2인에 대한 자문을 통해 표준화를 의미하는 문구를 도출했다(예: 표준개발, 표준화, 호환성, 방법표준, 서비스인증표준, 기준). 그 중 일부는 기사검색에서의 검색 용이성을 위하여 연구진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다(예: 평가방법표준, 서비스인증, 기준강화).

2단계, 1단계의 검색결과물과 검색결과물 분류코드를 함께 코드화 한다. 코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분류표는 <표 2>와 같다. 첫째, 표준화 완료시기는 각 과제의 표준화 완료시기를 숫자로 코드화 하되, 미완료된 과제의 경우 2014년으로 기술했다. 둘째, 분야의 경우는 국민행복표준의 경우 정부의 분류에 따라 ‘편리한 사회, 함께하는 사회, 풍요로운 사회’의 3개 분야로, 생활공감표준은 ‘편리한 사회, 건강한 사회, 미래사회’의 3개 분야로 유형화 했다. 셋째, 한국산업표준 분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산업표준(KS) 분류코드에 따랐다. 그러나 표준화 분류에 대해서는 1차 코딩 후 코더 간 불일치가 발견되어 2회 재 코딩을 통해 코더 간 신뢰도가 100%가 되도록 하였다. 다만, 하나의 과제가 2~3개의 한국산업표준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를 코딩하도록 하였다.

3단계, 코딩스킴에 따라 코드화(2단계완료)된 자료를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만든 뒤, Krcwic 프로그램(박한우·Leydesdorff, 2004)을 활용해 노드 간 공출현 행렬을 구성하였다.

4단계, 이렇게 만들어진 공출현 행렬을 투입 자료로 하여 Ucinet 6.0의 NetDraw를 활용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 실시되었다.

<표 2> 사회적 논의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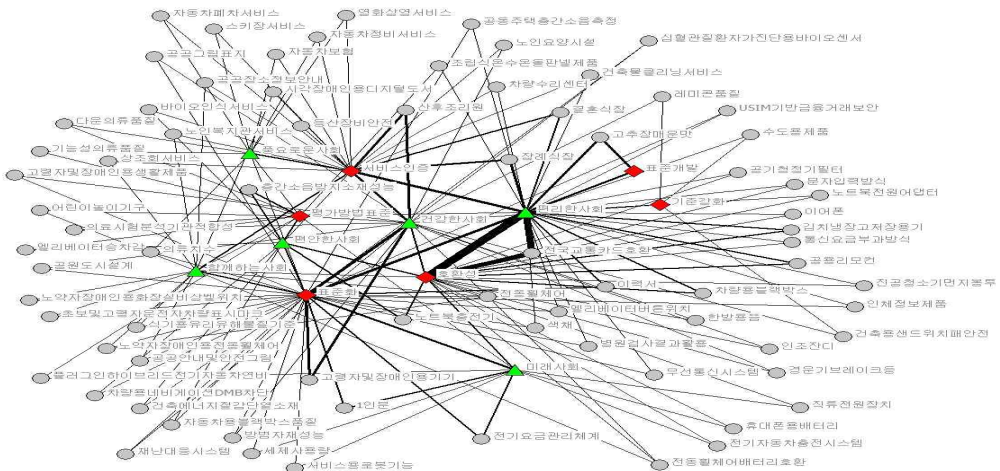
대분류		분류(노드)	분류 방법
신문 검색용	국민행복표준 (생활공감표준) 과제명	개별 과제의 키워드화	<부록 1>의 좌측 과제명을 우측 검색용 키워드로 치환
	표준화	표준화, 호환성, 서비스인증, 표준개발, 평가방법표준, 기준강화	‘표준화’를 의미하는 신문기사의 표현을 선정
유형 분류용	분야	편리한 사회, 건강한 사회, 미래사회, 편안한 사회, 함께하는 사회, 풍요로운 사회	국민행복표준/생활공감표준을 각각 3가지 분야로 분류한 정부의 유형화 기준에 따름
	표준화 완료시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표준화가 완료된 연도를 그대로 입력하되, 미완료된 경우 2014년으로 입력
	한국산업표준 분류	건설, 금속, 기계, 기본, 서비스, 섬유, 수송기계, 식료품, 요업, 의료, 일용품, 전기, 정보, 화학	한국산업표준(KS) 분류코드에 따름 단, 융합형태의 과제는 2~3가지 분류를 모두 코드화 함

IV. 분석 결과

1. 국민행복표준 과제별 사회적 논의 규모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국민행복표준 과제들의 사회적 논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3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표준화를 의미하는 ‘표준화, 호환성, 기준강화, 서비스인증, 표준개발, 평가방법표준’이라는 용어와 각 국민행복표준과제간의 관계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3>¹⁵⁾ 및 <표 3>과 같다.

<그림 3> 국민행복표준과제별 사회적 논의 규모



<표 3> 국민행복표준과제별 사회적 논의 규모 텍스트네트워크 분석결과: 노드별 아이겐벡터 중심

단어	빈도	아이겐 벡터 중심성	n아이겐 벡터중심성 (단위: %)	단어	빈도	아이겐 벡터 중심성	n아이겐 벡터중심성 (단위: %)
편리한 사회	171	0.613	86.742	공공안내 및 안전그림	2	0.002	0.313
호환성	120	0.567	80.125	노약자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2	0.002	0.346
표준화	100	0.149	21.126	노인복지관 서비스	2	0.002	0.267
건강한 사회	61	0.076	10.708	노트북 전원 어댑터	2	0.015	2.139
전국 교통카드 호환	61	0.461	65.225	다운 의류 품질	2	0	0.028
서비스 인증	60	0.124	17.517	무선통신 시스템	2	0.01	1.382

15) 회색 원(○)으로 표기된 노드는 국민행복표준 과제의 키워드이다. 녹색 삼각형(▲)으로 표기된 노드는 국민행복표준 과제의 6개 분야이다. 또한 빨간색 다이아몬드형(◆)으로 표기된 노드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추출된 '표준화'를 의미하는 단어들이다.

미래 사회	30	0.051	7.232	문자 입력 방식	2	0.015	2.139
편안한 사회	26	0.047	6.644	병원 검사결과 활용	2	0.01	1.382
고추장 매운맛	21	0.095	13.487	상조회 서비스	2	0.002	0.267
표준 개발	21	0.095	13.487	세제 사용량	2	0.003	0.363
함께하는 사회	21	0.023	3.294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	2	0.002	0.267
산후 조리원	16	0.02	2.894	심혈관질환 자가 진단용 바이오센서	2	0.003	0.408
평가방법 표준	16	0.008	1.092	어린이 놀이기구	2	0	0.056
고령자 및 장애인용 기기	15	0.022	3.06	엘리베이터 승차감	2	0.001	0.099
장례식장	15	0.071	10.021	인조 잔디	2	0.008	1.164
풍요로운 사회	12	0.008	1.071	전동 휠체어	2	0.018	2.565
단어	빈도	아이겐 벡터 중심성	n아이겐 벡터중심성 (단위: %)	단어	빈도	아이겐 벡터 중심성	n아이겐 벡터중심성 (단위: %)
노트북 충전기	10	0.039	5.56	전동 휠체어 배터리 호환	2	0.008	1.102
이력서	10	0.049	6.912	차량용 네비게이션 DMB 차단	2	0.003	0.356
1인분	9	0.012	1.635	초보 및 고령 운전자 차량 표시 마크	2	0.002	0.313
결혼식장	8	0.038	5.345	휴대폰용 배터리	2	0.008	1.12
전기요금 관리체계	7	0.009	1.272	건축에너지 절감 단열 소재	1	0.001	0.178
공용 리모컨	6	0.045	6.416	공공장소 정보안내	1	0.001	0.133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6	0.045	6.416	공기청정기 필터	1	0.008	1.069
차량용 블랙박스	6	0.045	6.416	공원 도시 설계	1	0.001	0.204
충간소음 방지 소재 성능	6	0.002	0.297	기능성 의류 품질	1	0	0.014
재난 대응 시스템	5	0.007	1.02	노약자 장애인용 화장실 비상벨 위치	1	0.001	0.156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5	0.02	2.799	노인 요양시설	1	0.001	0.181
진공청소기 먼지봉투	5	0.038	5.346	등산장비 안전	1	0.001	0.181
공공그림 표지	4	0.006	0.816	레미콘 품질	1	0.001	0.074
공동주택 충간소음 측정	4	0.02	2.765	바이오 인식 서비스	1	0.001	0.155
기준 강화	4	0.005	0.768	색채	1	0.005	0.691
엘리베이터 버튼 위치	4	0.02	2.765	수도용 제품	1	0.004	0.561
자동차용 블랙박스 품질	4	0.005	0.712	스키장 서비스	1	0.001	0.119
자동차 정비 서비스	4	0.003	0.476	영화 상영 서비스	1	0.001	0.119
USIM기반 금융거래 보안	3	0.015	2.074	의료시험 분석기관 적합성	1	0.001	0.076
방법자제 성능	3	0.004	0.612	의류 치수	1	0.001	0.142
서비스용 로봇기능	3	0.004	0.545	자동차 보험	1	0.001	0.119
식기용 유리 유해물질	3	0.003	0.469	자동차 폐차 서비스	1	0.001	0.119

기준							
이어폰	3	0.023	3.208	조립식 온수온돌 판넬 제품	1	0.004	0.563
인체 정보 제품	3	0.015	2.074	직류 전원 장치	1	0.004	0.56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2	0.009	1.336	차량 수리 센터	1	0.005	0.668
건축용 샌드위치패널 안전	2	0.001	0.147	통신요금 부과방식	1	0.008	1.069
경운기 브레이크 등	2	0.008	1.16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연비	1	0	0.053
고령자 및 장애인용 생활제품	2	0.003	0.408	한방용 뜰	1	0.004	0.582

분석결과를 보면, 국민행복표준 과제의 6개 분야 중 ‘편리한 사회(연결빈도: 171회)’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강한 사회(빈도: 61회)’, ‘미래사회(빈도: 30회)’, ‘편안한 사회(빈도: 26회)’, ‘함께하는 사회(빈도: 21회)’, ‘풍요로운 사회(빈도: 12)’의 순으로 사회적 논의 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논의가 가장 많았던 ‘편리한 사회’는 특히 ‘호환성(공출현 빈도: 93회)’과의 공출현 빈도가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전국 교통카드 호환(공출현 빈도: 61회)’과 가장 많이 논의되었다. 즉, 기술과 기술, 표준과 표준 사이의 호환을 통해 사용자가 다양한 표준에 맞는 여러 개의 기기를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호환성이 편리한 사회 구현에 공헌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전국 교통카드 호환(사회적 논의 빈도: 122회)’은 가장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던 국민행복표준과제였다. 교통카드가 호환성을 지니게 되면서 하나의 카드로 전국에서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해 지므로, 각 지역의 표준에 맞는 여러 개의 카드를 개설·휴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카드는 일반국민 대다수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매우 풍부했고, 편리한 사회 관련 표준과제의 사회적 논의 빈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표준화(연결빈도: 100회)’는 모든 국민행복표준 과제분야와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한 사회(공출현 빈도: 32회)’, ‘편리한 사회(공출현 빈도: 29회)’, ‘미래사회(공출현 빈도: 21회)’와의 연계빈도가 높았으며, 그 중 ‘고령자 및 장애인용 기기(공출현 빈도: 21회)’와 가장 많이 논의 되었다. ‘고령자 및 장애인용 기기(사회적 논의 빈도: 30회)’는 네 번째로 사회적 논의가 많았던 국민행복표준과제였다. 이처럼 복지 및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표준의 경우에도 사회적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의 기술적 측면 보다는 사회적 의미가 부각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서비스 인증(연결빈도: 60회)’의 경우 주로 ‘편리한 사회(공출현 빈도: 26회)’, ‘건강한 사회

(공출현 빈도: 18회)’와의 공출현 빈도가 높았다. 이는 서비스 인증을 통해 표준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그중에서도 특히 ‘산후조리원(공출현 빈도: 16회)’ 및 ‘장례식장(공출현 빈도: 15회)’서비스 표준이 공출현 빈도가 높았다. ‘산후조리원(사회적 논의 빈도: 32회)’ 및 ‘장례식장(사회적 논의 빈도: 30회)’는 사회적 논의 빈도가 각각 세 번째와 다섯 번째로 높았던 국민행복표준과제였다. 이 2가지 서비스 표준은 일반인들이 삶에서 한번은 거쳐 가는 서비스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일상생활에 높은 서비스 표준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비해 표준화된 가격체계나 서비스 절차, 기준이 없어 불편 및 불공정성에 관한 의문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로서, 표준화의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준개발(연결빈도: 21회)’은 주로 ‘편리한 사회(공출현 빈도: 21회)’ 및 ‘고추장 매운 맛(공출현 빈도: 21회)’과 공출현 빈도가 높았다. 특히 ‘고추장 매운 맛(사회적 논의 빈도: 42회)’은 두 번째로 사회적 논의가 많았던 국민행복표준과제였는데, ‘고추장 매운 맛 표준화’를 통해 고추장의 매운 맛의 등급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최근 식품가공업의 발달과 홈쇼핑을 통한 음식 판매, 한류로 인한 프랜차이즈 산업 등은 맛에 대한 기준을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추장의 매운 맛을 표준화 한다는 점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는 점도 이 표준화 과제의 사회적 논의 수준이 높았던 이유라고 해석된다.

‘평가방법표준(연결빈도: 16회)’은 주로 ‘편안한 사회(공출현 빈도: 8회)’와 함께 공출현 빈도가 높았으며, ‘충간소음방지 소재 성능 표준(공출현 빈도: 6회)’과 가장 많이 공출현하였다. 그러나 충간소음방지 소재 성능 표준의 경우 사회적 논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는데(6회), 이는 충간소음 방지의 중요성과는 달리 충간소음방지 소재 성능 표준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강화(연결빈도: 8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표준화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기준강화’는 ‘건강한 사회(공출현 빈도: 3회)’와 주로 공출현 빈도가 높았으며,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예: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안전, 수도용 제품, 레미콘 품질)와 함께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논의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1~2회). 이것은 안전기준의 강화와 달리 안전 관련 제품의 품질 기준강화는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노트북 충전기(10회), 이력서(10회), 1인분(9회), 결혼식장(8회), 전기요금관리체계(7회), 공용 리모컨(6회), 김치냉장고 저장용기(6회), 차량용 블랙박스(6회)’ 등 일상생활 활용빈도가 높은 국민행복표준과제의 사회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일상생활과 밀접할수록 사회적 논의의 빈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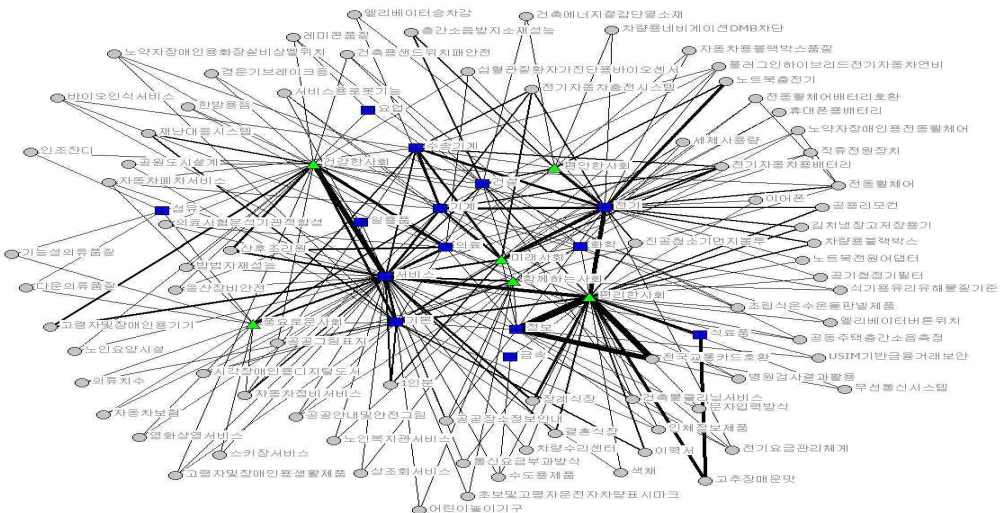
2. 국민행복표준 과제별 표준화 분야: 분야 간 융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다음으로 국민행복표준 과제가 한국산업표준(KS) 분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단, 하나의 과제가 2개 이상의 한국산업표준(KS) 분류에 해당될 경우 모두 선택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다음의 <그림 4> 및 <표 4>와 같다¹⁶⁾.

<표 4>와 같이 각 국민행복표준과제는 한국산업표준(KS) 분류 중 '서비스(빈도: 103회), 정보(빈도: 71회), 전기(빈도: 68회), 기본(빈도: 47회), 의료(빈도: 23회), 식료품(빈도: 21회), 건설(빈도: 18회), 수송기계(빈도: 17회), 기계(빈도: 11회), 화학(빈도: 8회), 섬유(빈도: 5회)'와 연계되어 있었다. 특히 서비스 제공의 절차와 품질을 표준화하는 것, 즉 서비스(S) 분야에 해당하는 국민행복표준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장 많다는 것은 <표 5>와 같은 산업표준 제정건수 현황분포¹⁷⁾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일반적인 산업표준 제정현황과 비산업표준에 해당되는 국민행복표준의 논의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함으로써 국민행복표준 제정에 대해서는 산업표준과 차별화되는 맞춤형의 정책제언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4> 국민행복표준과제별 표준화 분야(KS)



- 16) 회색 원(○)으로 표기된 노드는 국민행복표준과제의 키워드이다. 그리고 녹색 삼각형(▲)으로 표기된 노드는 국민행복표준과제의 6개 상위 카테고리이다. 또한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기된 노드는 한국산업표준(KS) 분야를 나타내는 키워드이다.
- 17)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표준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2013년 말 현재 112개 서비스표준이 있으며, 21개 한국산업표준 분류 중 20번째로 표준의 수가 많다(국가기술표준원, 2014b: 33).

<표 4> 국민행복표준과제별 표준화 분야(KS) 텍스트네트워크 분석결과: 노드별 아이겐벡터 중심성

단어	빈도	아이겐벡터 중심성	n아이겐벡터 중심성 (단위: %)	단어	빈도	아이겐벡터 중심성	n아이겐벡터 중심성 (단위: %)
편리한 사회	171	0.591	83.573	공공안내 및 안전그림	2	0.006	0.818
서비스	103	0.261	36.959	노약자장애인용전동휠체어	2	0.003	0.465
정보	71	0.487	68.847	노인복지관서비스	2	0.008	1.079
전기	68	0.192	27.131	노트북 전원어댑터	2	0.011	1.499
건강한 사회	61	0.115	16.27	다운의류품질	2	0	0.069
전국교통카드호환	61	0.445	62.948	무선통신시스템	2	0.015	2.064
기본	47	0.125	17.742	문자입력방식	2	0.015	2.064
미래사회	30	0.091	12.921	병원검사결과활용	2	0.016	2.207
편안한 사회	26	0.044	6.194	상조회서비스	2	0.008	1.079
의료	23	0.075	10.592	세제사용량	2	0.003	0.435
고추장매운맛	21	0.098	13.852	시각장애인용디지털도서	2	0.006	0.818
식료품	21	0.098	13.852	심혈관 질환 자가진단용 바이오센서	2	0.005	0.731
함께하는 사회	21	0.041	5.734	어린이놀이기구	2	0.002	0.318
건설	18	0.049	6.934	엘리베이터승차감	2	0.002	0.264
수송기계	17	0.071	9.988	인조잔디	2	0.002	0.225
산후조리원	16	0.049	6.913	전동휠체어	2	0.011	1.49
고령자 및 장애인용기기	15	0.038	5.406	전동휠체어배터리호환	2	0.003	0.465
장례식장	15	0.087	12.241	차량용네비게이션DMB차단	2	0.003	0.451
풍요로운 사회	12	0.034	4.759	초보 및 고령 운전자 차량표시마크	2	0.002	0.318
기계	11	0.094	13.295	휴대폰용 배터리	2	0.004	0.542
노트북충전기	10	0.029	4.093	건축에너지절감단열소재	1	0.001	0.089
이력서	10	0.049	6.859	공공장소정보안내	1	0.005	0.755
1인분	9	0.029	4.12	공기청정기필터	1	0.005	0.75
결혼식장	8	0.046	6.528	공원도시설계	1	0.002	0.23
화학	8	0.01	1.476	금속	1	0.006	0.822
공용리모컨	6	0.032	4.497	기능성의류품질	1	0	0.034
김치냉장고저장용기	6	0.032	4.497	노약자 및 장애인용 화장실 비상벨위치	1	0.001	0.206
전자자동차용 배터리	6	0.026	3.675	노인요양시설	1	0.003	0.36
차량용 블랙박스	6	0.032	4.497	등산장비안전	1	0.003	0.363
충간소음방지소재성능	6	0.004	0.533	레미콘품질	1	0.001	0.158
섬유	5	0.002	0.321	바이오인식서비스	1	0.004	0.614

재난대응시스템	5	0.008	1.151	색채	1	0.005	0.686
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	5	0.022	3.062	수도용 제품	1	0.006	0.822
진공청소기먼지봉투	5	0.026	3.748	스키장서비스	1	0.004	0.533
공공그림표지	4	0.014	1.922	영화상영서비스	1	0.004	0.533
공동주택층간소음측정	4	0.024	3.452	요업	1	0.001	0.158
엘리베이터버튼위치	4	0.019	2.623	의료시험분석기관적합성	1	0.004	0.504
자동차용블랙박스품질	4	0.006	0.903	의류치수	1	0.001	0.152
자동차정비서비스	4	0.02	2.761	일용품	1	0.003	0.363
USIM기반금융거래보안	3	0.022	3.096	자동차보험	1	0.002	0.282
방범자재성능	3	0.008	1.081	자동차폐차서비스	1	0.005	0.69
서비스용로봇기능	3	0.009	1.283	전기요금관리체계	1	0.007	0.988
식기용유리유해물질 기준	3	0.001	0.146	조립식온수온돌판넬제품	1	0.004	0.623
이어폰	3	0.016	2.249	직류전원장치	1	0.002	0.271
인체정보제품	3	0.024	3.456	차량수리센터	1	0.006	0.816
건축물클리닝서비스	2	0.016	2.226	통신요금부과방식	1	0.006	0.816
건축용 샌드위치패널 안전	2	0.002	0.334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연비	1	0.004	0.612
경운기 브레이크 등	2	0.003	0.4	한방용 뜸	1	0.001	0.182
고령자 및 장애인용 생활제품	2	0.007	0.961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표준 제정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기·전자(3,348건), 기계(3,197건), 화학(3,153건) 등 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행복표준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빈도에서는 3개 분야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기(빈도: 68회), 기계(빈도: 11회), 화학(빈도: 8회)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기본(빈도: 47회), 의료(빈도: 23회), 식료품(빈도: 21회), 건설(빈도: 18회), 수송기계(빈도: 17회), 섬유(5회)는 국민행복표준과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빈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표준 제정현황에서는 21개 분야 중 6~12위로 비교적 많은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환경 및 조성과 관련된 표준은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산업분야를 주로 논의하는 국민행복표준에서는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표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정보(X) 분야의 경우, 국민행복표준과제에서도 사회적 논의가 많았다¹⁸⁾. 특히 정보 분

18)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표준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2013년 말 현재 1600개 서비스표준이 있으며, 21개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4번째로 표준의 수가 많다(국가기술표준원, 2014b: 33).

야는 편리한 사회와 많이 연계되어 있었다.

〈표 5〉 산업 표준 현황과 국민행복표준과제의 사회적 논의빈도 순위 비교

순위	산업표준 제정 현황		국민행복표준과제 사회적 논의 빈도	
	한국산업표준 분류	제정현황	한국산업표준 분류	논의빈도
1	전기(전자)	3,348	서비스	103
2	기계	3,197	정보	71
3	화학	3,153	전기	68
4	정보	1,600	기본	47
5	금속	1,288	의료	23
6	섬유	883	식료품	21
7	건설	808	건설	18
8	수송기계	802	수송기계	17
9	의료	797	기계	11
10	환경	715	화학	8
11	기본	693	섬유	5
12	식품(식료품)	546	금속	1
13	조선	514	요업	1

* 서비스: 112개로 21개 분류 중 20위

이러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국민행복표준 과제의 한국산업표준 분류상 분포는 예상대로 산업표준 제정현황 분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즉, 국민행복표준 분야의 경우 보다 생활에 밀접한 비 산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 특히 국민행복표준과제의 사회적 논의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의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비산업분야의 표준제정과정에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발굴하려는 독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표준이 한국산업표준 분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기 보다는 다양한 분류가 결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 분야는 의료(공출현 빈도: 20회), 기본(공출현 빈도: 19회), 기계(공출현 빈도: 13회)와 함께 연계되어 있어 이들 간의 융합 표준정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의료서비스, 기계관련 서비스 절차 표준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 분야에서는 전국 교통카드 호환 과제와 공출현 빈도가 매우 높았으며(61회), 서비스, 기본, 의료 분야와 공출현하고 있어 정보 분야에서의 융합 표준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한국산업표준 분류와의 결합 빈도가 낮았는데, 일부

의료, 기타 서비스 분야 등에서 정보화 요구가 나타날 경우 정보와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석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전기 분야에서는 의료(공출현 빈도: 26회), 수송기계(공출현 빈도: 24회) 및 기계(공출현 빈도: 24회) 분야와 높은 공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다. 전기는 특히 다른 분야와의 공출현 빈도가 높았다. 수송기계 및 기계의 경우 결합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특히 의료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발전된 형태의 의료기기 표준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서비스(공출현 빈도: 8회), 화학(공출현 빈도: 3회)과 함께 나타났다. 예를 들어 건설 분야에서 건설 서비스 표준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 간 공출현 빈도들은 기능·기술의 융합 요구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능·기술 융합에 따른 새로운 표준의 필요성이 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융합표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제기할 수 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국민행복표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민행복표준은 일반적인 표준과 달리 일반국민으로부터 Bottom-up 형식으로 발굴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지난 6년간의 국민행복표준 과제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제정 완료되는 과제의 빈도가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3가지로 구분된 국민행복표준 분야의 설정 기준 역시 모호한 상황이다.

또한 생활 속의 불편한 사항을 아이디어로 제시하여 표준화하는 생활공감표준과 사회적 약자와 서비스분야로 범위를 확대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국민행복표준 간에 표준화 분야와 우선순위 차이로 인해 분야별 비교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표준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안된 과제가 탈락하는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활용함으로써 국민생활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의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가져온다(국무총리실, 2011). 물론 제안·발굴되는 국민행복표준이 표준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표준제정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므로 우선순위 고려 차원에서 탈락되는 과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체표준 제정 등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민행복표준제도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표준과 관련된 사회

적 논의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표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은 과제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활용빈도가 높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담은 경우였다. 예를 들어 '노트북 충전기, 이력서, 1인분, 결혼식장, 전기요금관리체계, 공용 리모컨,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차량용 블랙박스'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빈도가 높은 국민행복표준 과제의 사회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 대한 표준과제가 많았던 것도 이러한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국민행복표준에 대한 일반국민의 참여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해 먼저 '서비스' 분야의 표준과제를 집중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국민행복표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경향은 한국산업표준(KS) 분야별 산업표준 제정현황 분포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비산업표준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행복표준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행복표준에 대한 정책이 산업표준 제정과 차별화되는 정책영역이라는 개념적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행복표준은 사회적 논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행복표준의 사회적 논의경향은 실제 국민행복표준 수요와는 또 다른 논의이다. 실제로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표준이 필요한지를 의미하는 표준수요와 표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표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일종의 사회적 관심이다. 예를 들어 전국 교통카드 호환의 경우 교통카드의 사용자가 대부분의 일반국민이기 때문에 그 관심도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 빈도가 매우 높았다. 이처럼 사회적 논의 빈도가 높은 표준과제의 경우, 보다 빨리, 보다 편리하게 표준화를 하여 일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행복표준은 일반국민의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표준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수준을 조사함으로써 어떤 국민행복표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은지 파악할 수 있고, 표준화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국민행복표준 과제에서 한국산업표준 분류 간의 공출현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의료, 기본, 기계'와의 공출현이 나타났고, '정보'는 '서비스, 기본, 의료'와 공출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기'는 '의료, 수송기계, 기계' 분야와, '건설'은 '서비스, 화학' 분야와의 공출현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야 간 공출현 빈도들은 기능·기술의 융합 요구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능·기술 융합에 따른 새로운 표준의 필요성이 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아직 표준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가 낮았다. 표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규모는 약 6년간 321건 수준이었으며, 이는 하루에도 수만 건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특히 일부 국민행복표준과제의 경우 단 1회의 보도를 제외하고는 보도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즉, 국민행복표준 또는 생활밀접표준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사회적 논의에서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표준이 어렵고 복잡한 기술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활용되는 도구와 서비스에 녹아있는 공기와 같은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과 직장인을 상대로 한 표준교육을 실시하고, 각자의 일상과 관련된 표준과제를 발굴해 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행복표준 발굴과정에서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표준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최초로 국민행복표준의 사회적 논의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표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표준 관련 전문가나 해당 분야의 정책실무자들의 표준수요 조사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표준 전문가 및 정책실무자 등과 일반 국민들의 표준화 논의 간의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비교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키워드에 대한 도출 및 검증과정에서 2명의 전문가만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여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타당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는 국민행복표준의 발굴 및 제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 연구의 논의가 ‘표준제정’이 전반적인 문제해결의 본질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다. 표준제정은 새로운 기술의 태동을 방해하는 부작용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표준제정을 하기 위한 과제발굴과정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위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유성·최두호·김호원(2008). 모바일 RFID 보안기술 표준화 동향 및 표준화 추진 전략, 「전자통신 동향분석」, 23(2): 143-152.
- 권영환·최준근(2007). IPTV 기술 국내의 표준화 동향, 「정보처리학회지」 14(2): 4-10.
- 국가기술표준원(2014a). 소통과 협업을 통한 맞춤형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계획(2014. 2.), 「국가기술표준원」.
- 국무총리실(2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15). 2010.12.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표준심의회 위원회.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75호.
- 김상국·권순일·이병관(2007). 3GPP2 UMB 기술개요 및 표준화 현황, 「한국통신학회지」 24(1): 65-73.
- 김신호(2003). 고령화 사회에 있어 노인주택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정책의 방향모색, 「한국정책과 학회회보」 7(2): 263-278.
- 김인혜·박정옥·최문경(2006).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영재교육 연구. 16(1): 21-42.
- 김종국(2007). 국내 디지털 시네마의 기술표준화와 정책, 「디지털영상학술지」4(1): 11-27.
- 김지수·심준섭(2013). 공공앱의 사용자 리뷰에 대한 분석: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22(2): 65-90.
- 김태운(2012). 수요자 지향적 지역혁신정책의 특징과 정책실현의 한계, 「한국행정논집」 24(1): 161-182.
- 김태운(2013). 광역자치단체 과학기술정책의 수요충족성에 대한 연구: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3): 71-102.
- 김현철·조성겸·김학수(2009). 기후변화관련 사회적 논의의 변화: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연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 노화준(2002). 시장 지향적 정치, 행정개혁, 접근이론, 그리고 정책연구, 「한국정책학회보」11(3): 259-284.
- 박상인(2007). 혁신적 산업에서의 특허와 경쟁정책, 「Law & Technology」35(5): 109-126.
- 박상인(2009). 표준화 정책, 「행정논총」 47(1): 47-69.
- 박한우·Leydesdorff, L. (2004). 한국어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 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6(5): 1377-1388.

- 서정일·강경욱(2007). MPEG 오디오표준화동향, 「대한전자공학학회학술대회」.
- 성태경(2012). 표준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소고, 「경영경제」45(2): 49-67.
- 안정희·배성아(2009).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사회적 논의과정 분석: 일간지 보도 기사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0(3): 1-30.
- 이강찬(2007). 웹2.0 관련핵심표준화이슈, 「한국통신학회지」24(10): 51-57.
- 이순철(2004). 국내외 물류 표준화 정책 비교분석, 「사회과학논집」7: 139-158.
- 임성진(2001). 수요관리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정치학회보」35(3): 237-259.
- 정규진·서인석·김용희(2012). 시스템다이내믹스와 인구통계학적요인을 고려한 증거기반 사회기반 시설 정책 수요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22(4): 95-126.
- 정태희(2010). 주택수요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 순응형 주택정책 방향에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원」서울.
- 조재형·최형림·이창섭·박용성·권태우·정재운(2009). 향만물류정보의표준화 실태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8(2): 159-169.
- 조재희·조재원·최호규·윤순영(2007). Wibro Evolution 표준화 및 기술 동향, 「한국통신학회지」24(6): 93-102.
- 최승재(2008). 통신 산업에서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조화, 「법전」57(6): 96-137.
- 최윤정·권상희(2014).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의미연결망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1(1): 241-286.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9). ‘2009 산업기술백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홍성운(2009). 온라인상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16(3): 109-131.
- Bensen, M. & Farrell, J. (1994). Choosing how to compete: Strategies and tactics in standardization,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8(2): 117-131.
- Beyer, L. E. (2002). The politics of standardization: Teacher education in the USA, 「Journal of Education for Teaching: International research and pedagogy」28(3):239-245.
- Choi, D.G. & Lee, H.S. & Sung, T.K. (2011). Research profiling for standardization and innovation, 「Scientometrics」88: 259-278.
- David, P. A. (1987). Some new standards for the economics of standardization in the information age, 「Economic policy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206-239.

- Farrell, J. & Saloner, G. (1985). Standardization, Compatibility, and Innovation,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16(1): 70-83.
- Gandal, N. (2002). Compatibility, standardization, and network effects: Some policy implication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18(1): 80-91.
- Gandal, N., & Shy, O. (2001). Standardization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53(2): 363-383.
- Kettle, D. F. (2000). The Global Revolution in Public Management: Driving Themes, Missing Link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16(3): 446-462.
- Krishna, P. & Deepa, V. (2013). Biometrics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Biometrics and Bio-information』5(12).
- Samiee, S., & Roth, K. (1992). The influence of global marketing standardization on performance, 『The Journal of Marketing』1-17.
- Sung, T. K.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ization and innovative activity: An explanatory study on Korean service firms,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16(2): 153-166.
- Swann, P. (2010). The economics of standardization: An update, 『UK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부록 1> 국민행복표준(생활공감표준) 과제명에 대한 키워드 지원

구분	과제명	검색용 키워드
편 리 한 사 회	장례식장 서비스 인증 도입	장례식장 표준
	전국 지자체간 교통카드 호환 사용을 위한 표준화	전국 교통카드 호환
	취업지원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표준 이력서 개발	표준이력서
	모바일정보기기(휴대폰,PMP등)문자입력방식표준화	문자입력방식 표준
	진공청소기 먼지봉투의 표준화	진공청소기 먼지봉투 표준
	가전제품 공용 리모콘 표준 개발	공용리모콘
	차량 운행정보 기록을 위한 블랙박스 표준화	차량용 블랙박스 표준
	결혼식장 서비스 인증 도입	결혼식장 표준
	차량수리센터 서비스 인증 도입	차량수리서비스 인증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고추장 매운맛 등급 표준화	고추장매운맛 표준
	조립식 온수온돌 판넬제품 평가방법 표준화	조립식 온수온돌 판넬제품 표준
	RFID기반 공용자전거 통합관리(대여·반납)시스템 표준화	RFID 공용자전거 통합관리 시스템 표준
	가전제품(TV,PC 등)의 무선통신 시스템 표준화	가전제품 무선통신 시스템 표준
	모바일 USIM기반의 금융거래 보안 표준화	USIM 기반 금융거래 보안 표준
	노트북전원어댑터국제표준화	노트북 전원 어댑터 표준
	김치냉장고 저장용기의 표준화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표준
	엘리베이터 버튼위치 표준화	엘리베이터 버튼 위치 표준
	공동주택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측정방법 표준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표준
	병원간 검사결과(X-ray,CT,초음파 등)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병원 검사결과 공공활용
	"빨주노초파남보"알기 쉬운 색채표준 활용 확산	색채표준
공기청정기 필터의 표준화	공기청정기 필터 표준	
최신 한국인 인체정보 확산적용을 위한 제품표준 정비	한국인 인체 표준	
건 강 한 사 회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인증 도입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표준
	맑은 수도물 공급을 위한 수도꼭지, 금속관 등의 수도용 제품 안전성 강화	수도용 제품 표준
	건축용 샌드위치패널 화재 안전성 기준 강화	건축용 샌드위치패널 안전 표준
	건축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레미콘 품질기준 강화	레미콘 품질 기준
	경운기 브레이크등(燈) 표준화	경운기 브레이크 등 표준
	녹색 생활체육공간을 위한 인조잔디 표준화	인조잔디 표준
	의료 시험분석기관의 적합성평가체계 표준화	의료 시험분석기관
	고령자 및 장애인용 생활제품의 표준 개발	고령자 및 장애인용 생활제품 표준
건 강 한 사 회	사회적 배려계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 그림표지 표준 확산	공공 그림표지 표준
	한방용 뜸 표준화	한방용 뜸 표준
	차량내장재의 휘발성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표준화	차량 내장재 표준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표준화 및 인증 도입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표준
	산후조리원 서비스 인증 도입	산후조리원 서비스 인증
	홍수, 태러 등의 재난대응 시스템 표준화	재난대응 시스템 표준
	범죄예방을 위해 공원 등 도시설계 표준 개발	공원 도시설계 표준
	휴대용 심혈관질환 자가 진단용 바이오센서 표준화	바이오센서 표준
	방법자재 성능기준 표준화	방법자재 성능 표준
	도로교통 시설의 안전·편의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교통 시설 표준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기기 활용 편리성 향상 표준화	고령자장애인 표준
미래사회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 직류전원장치 표준화	직류전원장치 표준
	휴대폰용 배터리 표준화	휴대폰용 배터리 표준
	요식업에서 사용하는 1인분 표준화	1인분 표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표준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표준
	스마트그리드 기반 실시간 전기요금 관리체계 표준화	전기요금관리체계 표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표준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표준
	서비스용 로봇 성능기준 표준화	서비스용 로봇 기능 표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 연비측정 방법 표준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연비 측정 표준
	세계 적정량 사용을 위한 표준 개발	세계 사용량 표준
	편안한사회	노트북 충전기 호환
건물유리 및 창호 내풍압 성능기준		건물 유리 창호 내풍압 표준
층간소음방지소재 성능기준		층간소음방지 소재 성능 표준
엘리베이터 승차감 평가기준		엘리베이터 승차감 표준
차량용 네비게이션 (운전중 DMB 차단)		DMB 차단 표준
자동차용 블랙박스 품질기준		자동차용 블랙박스 품질 표준
바이오인식 응용 서비스		바이오인식 서비스 표준
함께하는사회	건축 에너지 절감 단열소재 기준	건축 에너지 절감 단열소재 표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 요구사항	어린이 놀이기구 표준
	전동휠체어 배터리 호환	전동휠체어 배터리 호환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 표준
	초보 및 고령자 운전자 차량 표시 마크	초보 및 고령자 운전자 차량 표시 마크 표준
함께하는사회	가전제품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	가전제품 장애인 접근성 표준
	식기용 유리 유해 물질 기준	식기용 유리 유해 물질 기준 표준
	공공안내 및 안전그림 표시	공공안내 및 안전그림 표준
	상조회 서비스 기준	상조회 서비스 표준
	공공장소 정보안내	공공장소 정보 안내 표준
	노약자·장애인용 화장실 비상벨 위치	노약자 장애인용 화장실 비상벨 위치 표준
	노약자·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노약자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표준

	노인복지관서비스 기준	노인 복지관 서비스 표준
	작업장, 공공구역의 안전색상 및 안전표시	작업장 공공구역 안전색상 및 안전 표시 표준
풍 요 로 운 사 회	자동차보험서비스 기준	자동차 보험 표준
	상해보험서비스 기준	상해보험 표준
	의료복지정보서비스	의료복지정보 표준
	한국인 인체치수를 고려한 의류치수 기준	의류치수 표준
	영화상영서비스 기준	영화상영 서비스 표준
	스키장서비스 기준	스키장 서비스 표준
	겨울철 다운의류 품질기준	다운의류 품질 기준
	기능성 의류(발열, 땀흡수 등) 품질기준	기능성 의류 품질 표준
	자동차정비서비스 기준	자동차 정비 서비스 표준
	자동차폐차서비스 기준	자동차 폐차 서비스 표준
	중고자동차매매서비스 기준	중고자동차 매매 서비스 표준
	2010년 생활 표준 선정 과제	이어폰 표준화
통신사별 요금부과 방식 표준화		통신 요금 부과 방식 표준
전동휠체어 표준화		전동휠체어 표준
등산장비의 안전성		등산장비 안전 표준
단열 및 차열페인트의 물성평가 기준 마련		페인트 평가 기준
실내 소음발생원인의 소음도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		실내 소음 측정 표준
	건축물 문짝의 표준화	문짝 등 표준화

* 2010년 생활표준 선정과제는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기술하였다.

<부록 2> 제정완료시기 미정 국민행복표준(생활공감표준) 과제

선정 연도	과제명
2011	장애인 화장실의 변기 높이와 지지대 높이 표준화
2011	옷 사이즈에 대한 표준화
2011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한 표준안
2011	노인운동 서비스 표준화
2011	ATM 메뉴의 표준화
2011	비데수압의 표준화
2011	자동차용 조명등 표준화
2011	고속(직행) 버스 좌석번호 배열방식 표준화
2011	도서관 청구기호 표준화
2011	휴대폰 충전기의 잭 표준화
2011	강의실 의자와 책상의 표준화
2011	노래방 리모컨 표준화
2011	스피커 음량의 표준화
2012	진공청소기 소음 최소화 기준
2012	세탁기 소음 최소화 기준
2012	레인저 후드 소음 최소화
2012	선풍기 단계별 바람세기 성능기준
2012	네온사인 적정 조도 기준
2012	음식점 밥 한 공기 적정용량
2012	관광안내 서비스 기준
2012	통역, 번역서비스 기준
2013	버스 손잡이 표준화
2013	커피컵 사이즈에 대한 표준화
2013	인조잔디의 화재안전성능 표준화
2013	항균제품의 항균력에 대한 표준화
2013	얼굴생김새의 크기에 따른 얼굴팩 형태/크기 표준화
2013	대피유도등 표준화
2013	가스레인지 불의 세기 표준화
2013	A/S 서비스질 등급 표준화
2013	실내전등 스위치 위치 표준화
2013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통행카드의 표준화
2013	자전거 도로 표준화
2013	유통기한 표기법 표준화
2013	염색약 및 색조화장품 색상 표준화
2013	인스턴트 식품 당도표시 표준화
2013	호프집 등 맥주용량 표준화
2013	진공청소기 소리 표준화
2013	여행지 관광안내소 표준화
2013	가전제품 등 장애인 점자 표시 표준화

<부록 3> 2009년 이후 표준화 추진과제 목록

과제명	선정시기	비고
장례식장 서비스 인증 도입	2009	2009년 선정 50대 생활표준화 선정과제
전국 지자체간 교통카드 호환 사용을 위한 표준화	2009	
취업지원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표준 이력서 개발	2009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인증 도입	2009	
맑은 수도물 공급을 위한 수도꼭지, 급속관 등의 수도용 제품 안전성 강화	2009	
모바일정보기기(휴대폰,PMP등)문자입력방식표준화	2009	
진공청소기 먼지봉투의 표준화	2009	
가전제품 공용 리모콘 표준 개발	2009	
차량 운행정보 기록을 위한 블랙박스 표준화	2009	
결혼식장 서비스 인증 도입	2009	
차량수리센터 서비스 인증 도입	2009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고추장 매운맛 등급 표준화	2009	
조립식 온수온돌 판넬제품 평가방법 표준화	2009	
RFID기반 공용자전거 통합관리(대여·반납)시스템 표준화	2009	
가전제품(TV,PC 등)의 무선통신 시스템 표준화	2009	
모바일 USIM기반의 금융거래 보안 표준화	2009	
건축용 샌드위치패널 화재 안전성 기준 강화	2009	
건축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레미콘 품질기준 강화	2009	
경운기 브레이크등(燈) 표준화	2009	
녹색 생활체육공간을 위한 인조잔디 표준화	2009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 직류전원장치 표준화	2009	
휴대폰용 배터리 표준화	2009	
노트북전원어댑터국제표준화	2009	
김치냉장고 저장용기의 표준화	2009	
엘리베이터 버튼위치 표준화	2009	
공동주택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측정방법 표준화	2009	
병원간 검사결과(X-ray,CT,초음파 등)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2009	
"빨주노초과남보"알기 쉬운 색채표준 활용 확산	2009	
의료 시험분석기관의 적합성평가체계 표준화	2009	
고령자 및 장애인용 생활제품의 표준 개발	2009	
사회적 배려계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 그림표지 표준 확산	2009	
차량내장재의 휘발성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표준화	2009	
한방용 뜸 표준화	2009	
요식업에서 사용하는 1인분 표준화	2009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표준화	2009	

스마트그리드 기반 실시간 전기요금 관리체계 표준화	2009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표준화	2009	
서비스용 로봇 성능기준 표준화	2009	
공기청정기 필터의 표준화	2009	
최신 한국인 인체정보 확산적용을 위한 제품표준 정비	2009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표준화 및 인증 도입	2009	
산후조리원 서비스 인증 도입	2009	
홍수, 테러 등의 재난대응 시스템 표준화	2009	
범죄예방을 위해 공원 등 도시설계 표준 개발	2009	
휴대용 심혈관질환 자가 진단용 바이오센서 표준화	2009	
방법자재 성능기준 표준화	2009	
도로교통 시설의 안전·편의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2009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기기 활용 편리성 향상 표준화	2009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 연비측정 방법 표준화	2009	
세계 적정량 사용을 위한 표준 개발	2009	
이어폰 표준화	2010	2010년 선정 생활표준화 추진과제
통신사별 요금부과 방식 표준화	2010	
전동휠체어 표준화	2010	
등산장비의 안전성	2010	
단열 및 차열페인트의 물성평가 기준 마련	2010	
실내 소음발생원인의 소음도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	2010	
건축물 문짝의 표준화	2010	
노트북 충전기 호환	2012	2014년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 4대 과제
건물유리 및 창호 내풍압 성능기준	2012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 요구사항	2012	
자동차보험서비스 기준	2012	
상해보험서비스 기준	2012	
층간소음방지소재 성능기준	2012	
엘리베이터 승차감 평가기준	2012	
차량용 네비게이션 (운전중 DMB 차단)	2012	
자동차용 블랙박스 품질기준	2012	
바이오인식 응용 서비스	2012	
건축 에너지 절감 단열소재 기준	2012	
전동휠체어 배터리 호환	2012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	2012	
초보 및 고령자 운전자 차량 표시 마크	2012	
가전제품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	2012	
식기용 유리 유해 물질 기준	2012	

공공안내 및 안전그림 표시	2012		
상조회 서비스 기준	2012		
공공장소 정보안내	2012		
노약자·장애인용 화장실 비상벨 위치	2012		
노약자·장애인용전동휠체어	2012		
노인복지관서비스 기준	2012		
작업장, 공공구역의 안전색상 및 안전표시	2012		
의료복지정보서비스	2012		
한국인 인체치수를 고려한 의류치수 기준	2012		
영화상영서비스 기준	2012		
스키장서비스 기준	2012		
겨울철 다운의류 품질기준	2012		
기능성 의류(발열, 땀흡수 등) 품질기준	2012		
자동차정비서비스 기준	2012		
자동차폐차서비스 기준	2012		
중고자동차매매서비스 기준	2012		
진공청소기 소음 최소화 기준	2013	2012년 국민행복표준화 선정과제	
세탁기 소음 최소화 기준	2013		
레인지 후드 소음 최소화	2013		
선풍기 단계별 바람세기 성능기준	2013		
네온사인 적정 조도 기준	2013		
음식점 밥 한 공기 적정용량	2013		
관광안내 서비스 기준	2013		
통역, 번역서비스 기준	2013		
장애인 화장실의 변기 높이와 지지대 높이 표준화	2013		2011년 국민행복표준화 선정과제
옷 사이즈에 대한 표준화	2013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한 표준안	2013		
노인운동 서비스 표준화	2013		
ATM 메뉴의 표준화	2013		
비데수압의 표준화	2013		
자동차용 조명등 표준화	2013		
고속(직행) 버스 좌석번호 배열방식 표준화	2013		
도서관 청구기호 표준화	2013		
휴대폰 충전기의 잭 표준화	2013		
강의실 의자와 책상의 표준화	2013		
노래방 리모컨 표준화	2013		
스피커 음량의 표준화	2013		

버스 손잡이 표준화	2013	2014년 국민행복표준화 선정과제
커피컵 사이즈에 대한 표준화	2013	
인조잔디의 화재안전성능 표준화	2013	
항균제품의 항균력에 대한 표준화	2013	
얼굴생김새의 크기에 따른 얼굴팩 형태/크기 표준화	2013	
대피유도등 표준화	2013	
가스레인지 불의 세기 표준화	2013	
A/S 서비스질 등급 표준화	2013	2013년 국민행복표준화 선정과제
실내전등 스위치 위치 표준화	2013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통행카드의 표준화	2013	
자전거 도로 표준화	2013	
유통기한 표기법 표준화	2013	
염색약 및 색조화장품 색상 표준화	2013	
인스턴트 식품 당도표시 표준화	2013	
호프집 등 맥주용량 표준화	2013	
진공청소기 소리 표준화	2013	
여행지 관광안내소 표준화	2013	
가전제품 등 장애인 점자 표시 표준화	2013	

주1) 진하게 표시된 과제들이 2014년 6월 현재 표준화가 완료되었거나 완료예정이었던 과제들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과제들임

주2) 표준화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바 <AS 서비스인증표준화>, <인조잔디 화재안전성능 표준화>와 같이 분석이 진행되는 중 표준화가 완료 (2014년 7월)된 과제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과제들은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심준섭(沈俊燮): 미국 뉴욕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갈등관리와 협상론, 원자력 정책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 이해관계자결정분석(stakeholder decision analysis) 기법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국 캘리포니아 송전탑 사례와 밀양 송전탑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2014)”, “이미지이론에 따른 의사결정 프레임분석: 진주의료원 폐업 사례를 중심으로(2014)”, “환경갈등 ADR 역량 비교분석: 한·미·일 3국간 비교를 중심으로(2013)” 등이 있다(jsshim@cau.ac.kr).

김지수(金智璿):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정책학 박사수로 상태이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의사결정론, 갈등관리, 언어네트워크분석, 평가, 정책형성과정분석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이해관계자결정분석(stakeholder decision analysis) 기법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국 캘리포니아 송전탑 사례와 밀양 송전탑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2014)”, “신뢰의 확산이 사회적 규제 적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2014)”, “공공앱의 사용자 리뷰에 대한 분석: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2013) 등이 있다(jisukim82@gmail.com).

윤태섭(尹太燮):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국립창원대에서 시간강사로 있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지방재정, 조세정책, 예산, 재무행정 등이며, 주요논문으로는 “From property taxes to consumption taxes: An empirical analysis of changes in tax revenue diversification of Florida counties(2014)”, “선거제도와 여성참여(2014)”, “Factors affecting the adoption of tax incentive programs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of Florida counties(2012)” 등이 있다 (tsyoon76@gmail.com).

<논문접수일:2014년 8월 17일/논문수정일:2014년 9월 22일/게재확정일:2014년 9월 23일>